

# 1. 전기요금 체계 추진방향

## 가. 주요 제도개선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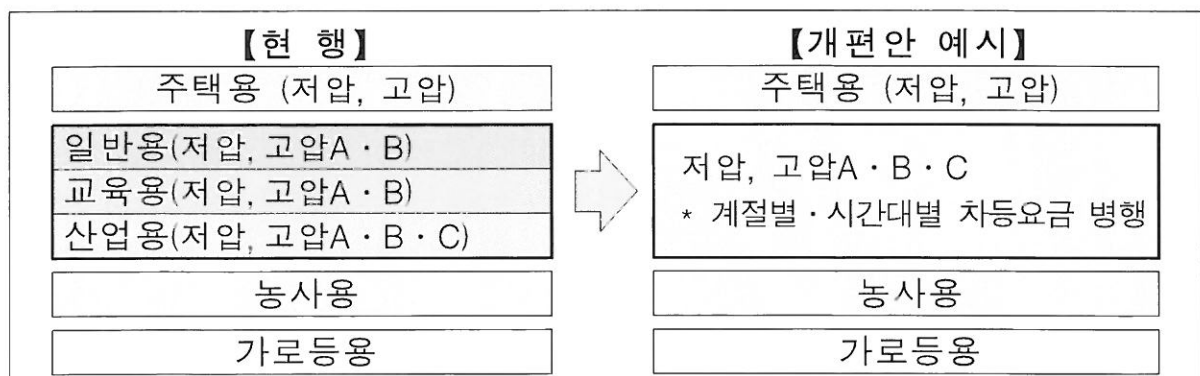
- 종별간 요금격차 완화 및 전압별 요금체계 기반 마련
  - 종별간 차등요금 조정으로 요금격차 대폭 완화
    - \* 누계 인상률('09 → '13년) : 산업용 49.9%, 일반용 28.9% 등
  - 일반용(을)·산업용(을)은 종별 요금격차 축소 후 단가 통합('13.1월)
- 주택용 누진요금체계 개선 → '05년 이후 개선 미미
  - 체계개편 이전의 7단계 18.5배의 누진제를 6단계 11.7배로 완화('04)
  - 누진제 완하시 저소득층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할인 제도 도입('04)
- 농사용(을) 계약전력 1,000kW 이상 → 산업용(을) 적용('12.11)
  - 농사용(을) 고압고객 계절별 차등 요금제 도입('13.11)

## 나. 향후 추진과제

- 원가에 보다 충실한 요금체계(계시별 확대 등)로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
-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전기사용 불편 해소
- 다양한 선택요금제 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
- 과도하게 요금이 낮아 소비가 급증하는 농사용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

## 다. 중장기 요금체계 개선방안 ('09년 로드맵 수립)

- 종별 요금격차 완화 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
- 전기사용 특성, 해외사례 등을 고려 주택용 누진제 단계적 완화



## 2.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

### 가. 요금제도 현황

- (전기요금) 전국 동일 단가를 적용하며 용도별로 차등
- (원가구성) 기능별로 발전·송전·배전·판매비 등으로 구성
- (송배전원가) 발전소 인접정도, 부하밀집도 등에 따라 지역별 차이발생

- ▷ 송전원가 : 발전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, 제주지역 등이 높음
- ▷ 배전원가 : 부하밀집도가 낮은 강원, 전남지역 등이 높음(수도권은 낮음)

### 나. 주요 고려사항

- 송전원가만 고려하는 경우 수도권지역의 원가가 높음
- 송배전원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, 부하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전기요금 인상, 부하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은 인하 필요
- 전력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증가는 발주법, 송주법을 통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 (비용/자산 세부 지역구분 등의 한계)
-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차등 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

####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지원내용

- (지원내용) 발전기로부터 10km 이내,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

발전소용량	주택용	산업용	발전소용량	주택용	산업용
100 미만	100kWh 해당액	1,500원/kW	400~500	140kWh 해당액	2,300원/kW
100~200	110kWh 해당액	1,700원/kW	500~600	150kWh 해당액	2,500원/kW
200~300	120kWh 해당액	1,900원/kW	600~700	160kWh 해당액	2,700원/kW
300~400	130kWh 해당액	2,100원/kW	700 이상	170kWh 해당액	2,900원/kW

####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기설 345kV이상 송·변전설비 주변 마을

송전선로	765kV	345kV	변전소	765kV	345kV
	1,000m이내	700m이내		850m이내	600m이내

- (지원규모) 약 1,260억원/년 (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수준)
- (지원방법) 전기요금 등 직접지원(50%) + 마을 공동사업(50%)

#### <154kV 설비 제외사유>

- 154kV 설비는 배전과 연결되는 지역자체 공급용이며, 전국 지원시 효과 불투명  
→ 보상·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원부담 초래 → 수혜자가 비용부담자가 됨
- 154kV설비 주변지역은 지가하락 영향이 적고, 자가설비 보유기업 부담 야기 등

### 3. 송전비용 영향요인 및 송전이용요금 제도

#### 가. 송전비용 영향요인

- (송전손실) 발전소 입지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이 불일치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송전손실도 증가
  - (송전혼잡비용) 수도권 지역의 전력사용이 많아 북상조류\*가 증가하면서 송전선로 용량제약에 따라 발전회사에 지불하는 정산금 증가
    - 북상조류량(송전제약), 대체발전원 등에 따라 송전비용 상이
- \* 북상조류 : 영동, 중부지역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전력

#### 나. 송전이용요금 제도 개요

- (부과대상) 전력수요 고객은 부과중이며 발전고객은 유보하고 있음
  - \* 양방향 입찰시장을 전제로 설계, '부과시기 확정시까지 유보' 하기로 결정('02.12)
- (요금차등) 사용요금은 송전망 투자비용 유발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하여 발전고객과 수요고객에게 입지신호 제공
  - \* 발전고객 사용요금은 원거리를 수송하는 비수도권이 높고, 수요고객 사용요금은 발전원이 적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제주가 높음 (기본요금은 전국 단일)

구 분		발전고객	수요고객
기본요금(원/kW)		902.1	921.9
사용량요금 (원/kWh)	수도권북부(한강이북)	0.80	2.84
	수도권남부(한강이남)	1.64	
	비수도권	1.97	1.70
	제 주	0.75	8.42

\* 의제 구역전기사업자(지역냉난방, 산업단지)에게만 부과 중

#### 다. 송전요금 지역별 시장가격 제도 도입

- 송전혼잡비용, 제약비용 등 지역별 차등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